

OECD의 지식재산권 활동

조사조정팀 장 관 용

OECD에 대하여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후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3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되었다.

OECD의 정책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서의 개발 원조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있는 앙드레 파스칼 거리에 두고 있다. 여기서는 30개 회원국과 70여 관련 국가가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짜내고 있는데 국제회의만 한 해 2000여회가 열리고 5만 여명이 이곳을 찾는다. OECD의 움직임은 세계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구촌 싱크탱크"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OECD의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

OECD에서는 1994년 과학기술 지표로서의 특허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Patent Manual」발행 이후,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새 지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1995년 10월 과학기술위원회(CSTP) 각료회의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1996년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정부 공식 기관의 설문조사와 통계정보의 부

가적인 활용을 요청하고, OECD 회원국이 지식기반 경제의 혁신적인 수행과 관련 산출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지표를 개발하도록 협력할 필요를 인정하였다. 특히 평가(Assessment), 관리(Monitoring), 정책결정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운영위원회(각국 과학기술지표전문가(NESTI), 기술혁신정책(TIP) 전문가 그리고 과학시스템 전문가, OECD 사무국과 독자적인 전문가 등)가 이 연구를 감독하도록 임명되었고, 1996년 10월 CSTP 회의에서 새 지표 개발을 위해 7개 분야가 선정되었는데, 정책관련성, 데이터 원천과 통계적 기법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7개 분야는 「인적자원의 이동성」, 「특허지표」, 「기업의 혁신 능력」, 「R&D 국제화」,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기여도」, 「품질경쟁」이다.

이 중에서 「특허지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특허지표에 관한 국제 특허 출원의 영향(Impact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of Patent Indicators)」과제는 독일 ISI의 Ulrich Schmoch 박사가 유럽, 미국, 일본에 출원된 특허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허의 가치가 높으면 유럽 특허청(EPO), 특허협력조약(PCT) 또는 직접 출원의 절차를 거쳐 출원국 수를 확대하게 되고, PCT에 의해 출원 공개일이 18개월 더 지연됨에 따라 발명활동을 측정하는 특허통계의 한계성 및 그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고, "국제 기술 지표로서 미국 특허의 이용 : 가능성 연구(The Use of U.S Patent Citations as International Technology Indicators A Feasibility Study)" 과제에서는 특허의 기술적 가치와 지식의 확산을 측정하여 국제 비교를 위한 특허 인용의 가능성을 연구하였고, 또한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새 지표 발굴(New Indicators from Patent Data)"과제에서는 EPO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우선 연도에 의한 출원건수와 R&D 지출비 상관관계가 강하며 특허권 건수와 총요소생산성의 상관관계가 강함을 연구하였다.

OECD의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1972년에 설립되어 상설 사무국인 과학기술산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DSTI)의 감독과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30개 OECD 회원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이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산하에는 5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술혁신정책그룹(TIP), 과학기술전문가그룹(NESTI), 생명공학그룹(GB), 과학시스템작업그룹(GSS), 거대과학포럼그룹(MSF)이 그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정책반(TIP)에서는 국가혁신 시스템(NIS), 혁신에 대한 케이스 연구, R&D의 공공/민간 투자 형태, 혁신에 대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프로젝트, 혁신과 지식재산권, STI Outlook을 최근의 연구사업으로 정해놓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혁신과 지적재산권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연구로서 회원국 전문가들로 IPR Focus Group을 구성하여 관련 Survey 작성 및 사례 연구의 작업방향제시 등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도국은 네덜란드와 미국이며 한국, 독일, 일본 등이 참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그룹(GB)에서는 생명기술에 관련된 활동에서 연구, 개발 그리고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유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및 유전자 자원 서베이(1996)를 진행하였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무역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되어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에 관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작업반(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과 함께 1999년 G8 정상회의에서 요구된 5개 사항, 즉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 환경적 영향, 국제 혹은 각 국가의 식품안전시스템 검토,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전문가그룹인 NESTI에서도 2000년 부터 국제 특허통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방법론 연구, 실증적 연구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04년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OECD 회원국의 국내 특허 활동

<아래에 조사된 자료는 1983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공개된 특허 771,760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OECD 회원국은 2003년 현재 기준인 3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지난 해 5월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공동 발간한

『특허경쟁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OECD 회원국의 국내 특허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특허 출원 건수 771,760건 중 내국인 특허 출원이 451,548건으로 58.8%에 달하며 나머지 41.2%가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출원건을 포함하여 OECD 회원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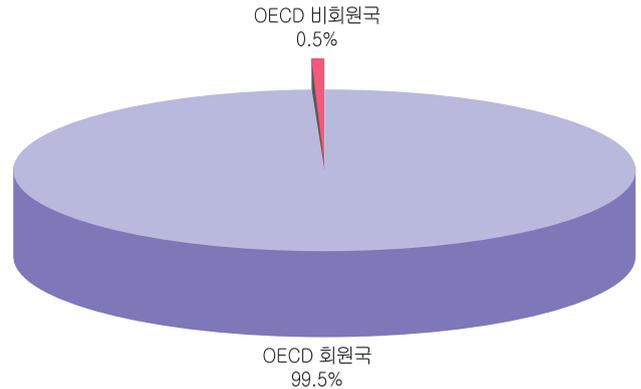


그림1.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국내 특허 출원 점유율 비교

특히, OECD 회원국 특허출원건수 순위에서는 내국인 출원을 제외하고 일본이 135,084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조사되었다.

번호	국 가	특허출원건수	번호	국 가	특허출원건수
1	한국	451,548	16	오스트리아	976
2	일본	135,084	17	노르웨이	582
3	미국	95,457	18	스페인	475
4	독일	29,199	19	헝가리	427
5	프랑스	11,479	20	룩셈부르크	233
6	네덜란드	9,880	21	뉴질랜드	188
7	영국	8,766	22	아일랜드	181
8	스위스	7,725	23	멕시코	39
9	스웨덴	3,829	24	그리스	36
10	이탈리아	3,822	25	폴란드	21
11	캐나다	1,952	26	체코	16
12	호주	1,868	27	포르투갈	14
13	벨기에	1,305	28	터키	12
14	핀란드	1,246	29	슬로바키아	10
15	덴마크	1,231	30	아이슬란드	7

표1. OECD 회원국별 국내 특허출원건수

OECD 회원국별 특허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17.6%, 미국 12.4%, 독일 3.8%, 프랑스 1.5%로 나타났다. 그 외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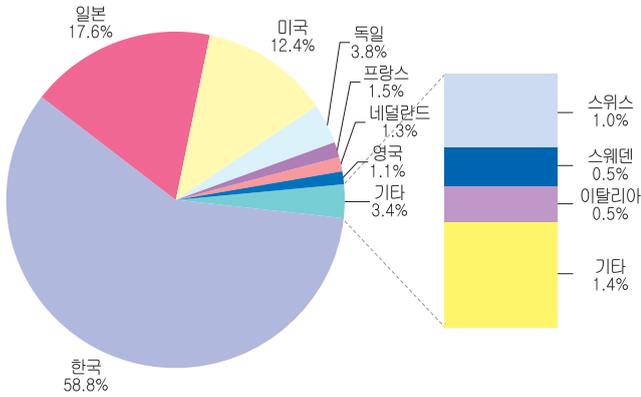


그림 3. OECD 회원국별 특허 출원 점유율(%)

OECD 비회원국 중 특허 출원 순위 상위 30개국을 기록한 국가로는 대만(989건), 이스라엘(742건), 리히텐슈타인(342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허출원 상위 30개국 중 OECD 비회원국은 8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국 가	회원국	특허출원건수	번호	국 가	회원국	특허출원건수
1	한국	OECD	451,548	16	대만		989
2	일본	OECD	135,084	17	오스트리아	OECD	976
3	미국	OECD	95,457	18	이스라엘		742
4	독일	OECD	29,199	19	노르웨이	OECD	582
5	프랑스	OECD	11,479	20	스페인	OECD	475
6	네덜란드	OECD	9,880	21	헝가리	OECD	427
7	영국	OECD	8,766	22	리히텐슈타인		342
8	스위스	OECD	7,725	23	러시아		252
9	스웨덴	OECD	3,829	24	룩셈부르크	OECD	233
10	이탈리아	OECD	3,822	25	네덜란드안탈라스		218
11	캐나다	OECD	1,952	26	남아프리카		215
12	호주	OECD	1,868	27	중국		215
13	벨기에	OECD	1,305	28	뉴질랜드	OECD	188
14	핀란드	OECD	1,246	29	홍콩		182
15	덴마크	OECD	1,231	30	아일랜드	OECD	181

표 2. 국내 특허 출원 상위 30개국 현황

마치며....

현재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서 미래의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화두는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의 유동성에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인 연구개발(R&D)에서 기술이 경제 및 산업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기술혁신 노력이 각국의 기술정책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OECD에서는 최근 과학기술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줄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해 일본에서도 중국의 해적판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터라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OECD는 권고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략적 권고는 보통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심 의제로 채택된다고 한다. WTO가 OECD의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OECD를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 문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경쟁정보 보고서 2002.5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의 특허동향 2002 2002.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OECD 기술혁신정책 활동 분석 2002
 배영자,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ECD 국가들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활동 조사 분석 2000
 권용수, OECD 과학기술 지표 분야 활동 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성창, 특허정보분석기법 2002
 김승동, 경제개발협력기구 2003
 www.oecd.org